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복기

목진후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명예교수



· 한국정책학회 회장  
· 서울후해연료 정책포럼 위원장 역임

### 시작하며

2017년 6월에 열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 혹은 포기의 여부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의사 확인을 위해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춘 보통 국민들에게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의 제공과 토론을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는 사회 조사 방식이다.

영국과 같은 서구의 몇몇 국가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적용한 경험이 있다.

이번의 공론조사는 5백명에 가까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포기에 대한 심층 탐구와 토론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10월 20일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포기 여부에 관한 국민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혹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소위 친핵과 반핵으로 나누어져 있는 논쟁은 서로의 주장이나 기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경우가 그러한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인정하려 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의 문제는 원자력계에 위기였지만 반면에 좋은 기회였다. 원자력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우리 사회가 원자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어떤 사회이든 건강한 사회라면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포기의 논쟁을 양쪽 집단이 제시하는 주장,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사실적 자료,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논리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건설 재개와 포기의 주장을 분석하여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의 근거를 추론해 보고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에너지 구성의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조명해 본다.

### 인식과 행동의 이론적·경험적 근거

공공정책의 만족과 기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James Oliver(2012)에 따르면 기대(expectation)는 주어진 현상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will be)' 혹은 '일어나야 한다(should be)'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

자신이 직면하는 현상에 대해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경우와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는 경우로 구분하거나 혹은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인식하는 점이 인간을 독특한 동물의 반열에 들게 한다.

오늘 경기에 상대하는 팀에게 과거에 이겼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오늘 경기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경험에 근거한 기대(positive expectation)라고 한다. 반면에 과거에 이겼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기대는 규범적 기대(normative expectation)라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post season에 진출하지 못하는 한화 야구팀의 경기

를 어김없이 응원하는 열렬 관중은 현실적 기대보다는 규범적 기대를 바탕으로 소위 '독수리 보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실적 기대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학습에 의해 변할 수 있지만 규범적 기대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매우 변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

사람들의 인식은 자신의 경험과 학습 그리고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다. 경험과 학습에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 과학자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한 Kahan, Jenkins-Smith, and Braman(2010)은 학습과 숙의 과정이 자신의 인식과 가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 설령 매우 과학적인 문제이며 과학자 집단에서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자신의 인식과 가치에 부합할 경우에만 수용하며, 이의 결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입장보다 더 강한 입장을 취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자기 강화 논리가 과학적 지식의 전달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결국,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과 토론은 자신만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신이 믿지 않고 싫어하는 정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국내에서 「이기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True Enough」의 저자인 Manjoo(2008)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가치(보수 혹은 진보)와 무관한 영역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부합하는 정보가 사실일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현상은 편향 동화 현상(biased assimilation)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이념에 충실한 TV 시청자는 자신이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방송사가 설령 잘못된 스포츠 뉴스를 제공했다더라도 그것이 진실된 정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한 실험 조사의 결과를 제시한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현상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념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정보만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중단에 관한 인식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포기 주장의 근거

전기 공급의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것인가 혹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탈핵의 철학은 원자력 발전을 수용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으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자력 발전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기의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믿는 집단은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신재생 에너지 대안을 충분한 대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불가피한 위험은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포기를 주장하는 소위 ‘친핵’과 ‘반핵’의 주요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측의 주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과 가치가 어떻게 그들의 주장의 합리화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건설 포기의 이유

‘반핵’의 입장에서 보는 공사 중단의 근거는 우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위험 인식의 증가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초래할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지역의 인구 밀도와 발전소의 숫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줄이는 정책은 당연한 노력이 된다.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이 강조하는 경제성이나 환경성의 유리함이 과장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낮다는 주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는 현상과 해체 비용이나 위험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세계의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현상도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독일, 스위스, 대만 등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 나라들이며 우리가 그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한다.

최근 ‘탈핵’ 움직임의 주된 동인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들 수 있다. ‘탈핵’을 주장하는 환경집단들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으로 ‘탈핵’을 포함하게 만든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집권할 경우 ‘탈핵’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결과로, 최근 원자력 발전의 축소 움직임이나 공사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중지도 그러한 시도의 사례가 된다. 이러한 주장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이나 시장의 확대 등으로 경제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는 주장도 중요한 근거이다. 그 동안 연구, 기술, 운영 등과 관련된 집단의 기술 독점과 독주 현상이나 최근의 원전 관련 기자재 납품 비리 사건 등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운영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 중요한 사례들이다.

### 건설 재개의 이유

‘친핵’의 입장에서 보는 공사 재개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약 3조 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공정률이 30%에 이르고 있고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 하더라도 약 1조 6천 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통산 수만 명의 인력이 생업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다. 만약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매몰 비용과 계약 위반의 위약금 등에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사 인력의 실직이 뻘하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동안 지역 경제와 발전에 큰 부분이 되었던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이 종식될 것이라는 점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설 포기에 따른 매몰 비용의 감수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수출국으로서 위상 추락을 감수해야 하며, 특히 안보적 차원에서의 원자력을 경시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원자

력의 포기는 관련 학문과 지식 영역에서의 지식 축적과 인력 양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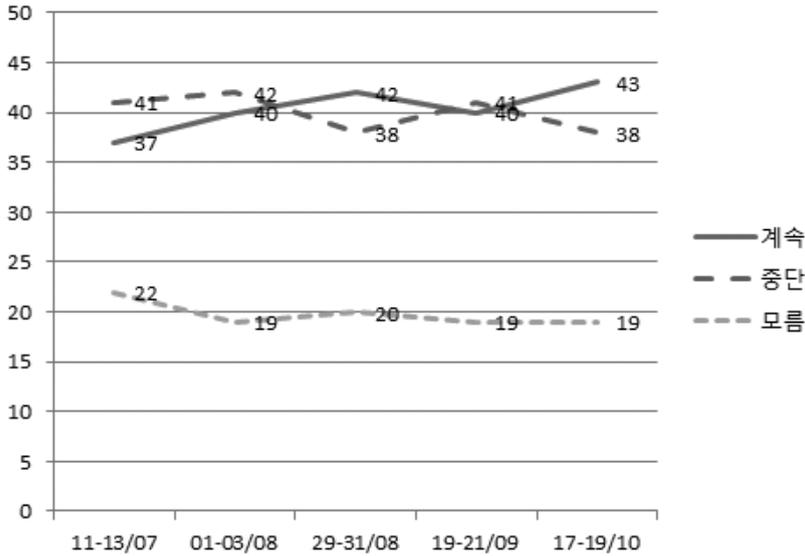
###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포기에 대한 국민 인식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어떠한가? 그 동안 수없이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최근의 한국 Gallup 조사 결과가 있다. Gallup은 2017년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다.

조사에 응답한 1000 여명의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대를 표명한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나 다른 면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상반된 혹은 이중적 인식은 원자력 발전이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력의 공급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다고 보는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행기가 매우 위험하지만 그래도 장거리 여행의 수단으로 비행기를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국 Gallup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중단에 관련된 인식 조사를 2017년 7월, 8월, 9월과 10월에 걸쳐 다섯 차례 실시했다.<sup>11)</sup> 각각의 조사에 무작위로 추출된 1000 여명의 응답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포기에 대해 변화하는 인식을 보여 준다.

<sup>11)</sup> 한국 Gallup의 인식 조사는 7월 11~13일, 8월 1~3일, 8월 29~31일, 9월 19~21일, 그리고 10월 17~19일에 실시되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가중치를 고려한 1004명의 응답자를 표본으로 한다. 조사의 시기별로 별도로 추출된 표본은 신뢰도 95%에 표본 오차 ± 3.1%의 범위를 설정한다. 설문지 질문으로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귀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를 사용했다.



〈그림 1〉 전체 응답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에 전체 응답자의 37%가 찬성을 표하나 건설 포기에는 41%가 찬성하고 있다. 8월 말의 조사에서는 42%가 건설 재개에 찬성하며 건설 포기 찬성의 38%를 초월한다. 그러나 9월의 조사에는 건설 재개에 40%의 찬성을 건설 중단에는 41%의 찬성률을 보인다.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있기 직전인 10월 17~19일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43%가 되어 반대보다 약 5% 포인트 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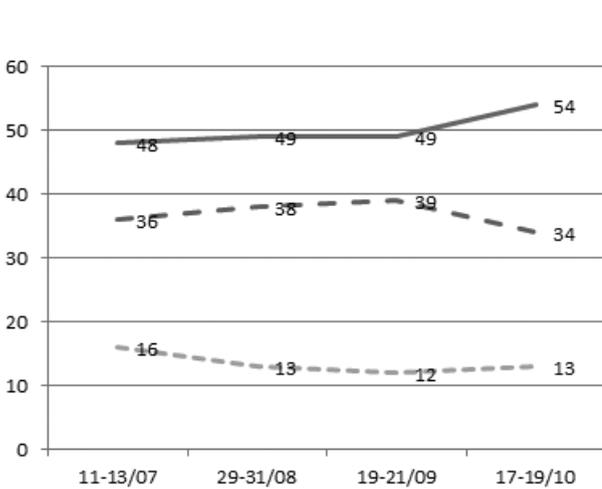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해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남성 응답자의 과반 정도가 공사 재개를 지지하는 인식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여성 응답자의 찬반 인식은 조사 시기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7월 조사에서는 26%만이 건설 재개에 찬성했으나 9월 조사에는 32%가 찬성하였다. 찬성으로 6% 포인트의 변화는 괄목할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10월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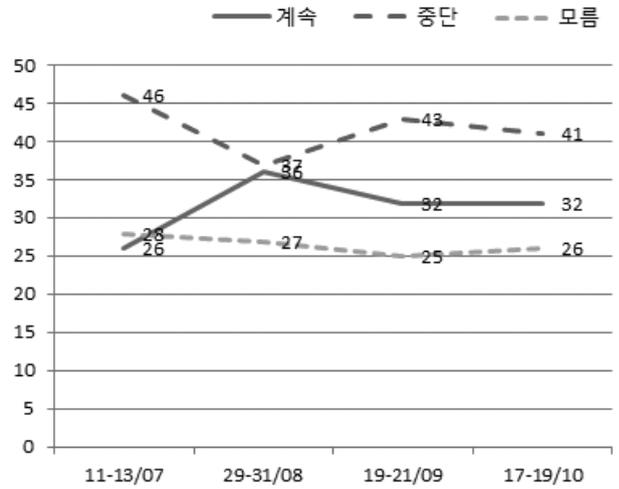
사의 결과에서 남성의 찬성률은 과반을 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

설문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의 인식이 지역별로 다를 것이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추측이 가능하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응답자들은 9월 조사에서는 47%가 건설 재개에 찬성하나 44%는 건설 중단을 지지한다. 10월 조사에서는 반대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나 찬성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가 ±3.1%인 점을 고려하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된 조사 결과이므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국민 인식의 전반적인 추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중단에 대해 경합하는 인식을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인식이



〈그림 2〉 남성 응답자



〈그림 3〉 여성 응답자

찬반으로 나누어지며 중간 입장의 폭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결국 중간 입장을 지닌 국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변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인식은 건설의 재개 쪽에 보다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인식이 찬반의 경합 현상을 보일 것이나 건설 재개 쪽으로 우호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경합하게 되면, 오차범위의 논란이 발생하여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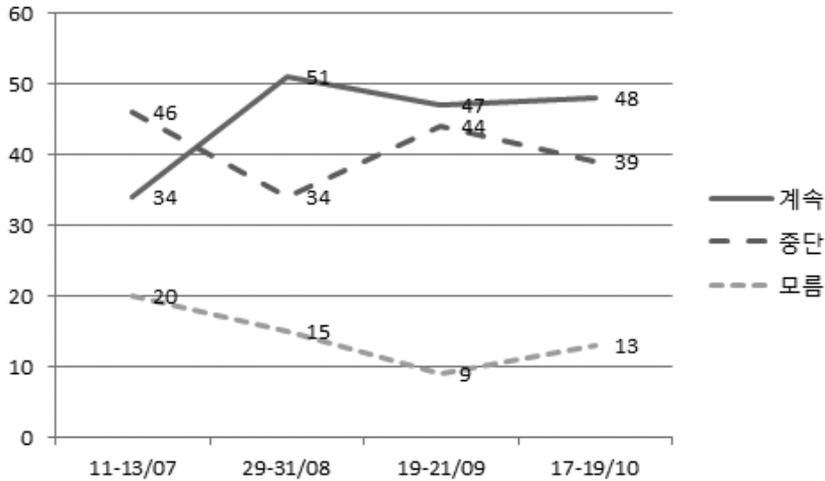
### 공론화 조사의 결과와 의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일반 국민들이 보여

준 인식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공사재개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탈원전의 논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건설의 재개와 중지의 인식 차이가 더 벌어진 이유로 초기에 별 의견이 없거나 중도적인 입장을 지녔던 참여자들이 건설 재개의 주장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참여단의 입장 변화가 괄목할 정도인 점도 이 문제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매우 유사하다.

시민참여단의 인식 변화 역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건설 재개와 반대의 인식 차이가 일반 국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 점은 학습의 기회와 정보 제공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학습과 토론의 과정에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 제공될 때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그림 4〉 부산·울산·경남 지역 응답자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사전 지식과 입장이 확실하지 않았던 집단에서 일어난 것이다. 즉, 이미 원자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확실했던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간자적 혹은 특별한 입장이 없었던 집단이 올바른 정보의 제공으로 입장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지금과 유사한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게 분석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나가면서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여 ‘친핵’과 ‘반핵’집단의 주장,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 그리고 사람의 인식과 판단에 대한 학술적 연구 결과와 원자력 발전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veil of ignorance’의 원

칙을 강조한다. 갈등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판단의 과정에서 자신의 철학이나 이념 혹은 가치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소위 말하는 객관적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가 아닌 제3자의 전문가에 의해 경기규칙이 결정되어야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심판의 결정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분석 기준의 객관적·사전적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현상에 대한 분석의 과정이나 판단이라는 선택이 불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포기에 대한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도 그들의 분석과 판단의 과정에 이러한 인식과 자세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 그들의 판단은 개인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먼 미래의 시작이 되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집단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11월 경주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 항상 이런 점을 자랑한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의 “원자력은 위험하기에 원자력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엄청나게 역설적인 표현이다.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의 문제는 원자력계에 위기였지만 반면에 좋은 기회였다. 즉, 원자력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우리 사회가 원자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원자력이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기에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원자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원자력계는 우선 올바른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매진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충분하

게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와 지식 전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정보 제공 주체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국가를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는 현재의 건강함을 유지 혹은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회이다.

현대 사회에서 전력의 역할은 산업 발전을 넘어서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다. 내일의 우리가 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그 원동력인 전력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전기의 생산에 하나의 방식이나 특정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활용하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잊지 말아야 정책의 지혜에 해당한다.

2017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수단으로 ‘탈원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내일의 우리 모습을 올바르게 조명한 결과인지를 정부는 다시 쟁겨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한국 Gallup 2017. 데일리 오피니언 제267호, 제274호, 제277호, 제280호
- Kahan, Jenkins-Smith, and Braman, 2010. Cultural Cognition of Scientific Consensus. Journal of Risk Research, 1-28.
- Manjoo, Farhad 2008. True Enough: Learning to Live in a Post-Fact Society (이기적 진실).
- Oliver, James 2011 Managing Citizens'Expectations of Public Service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89(4): 1419-1435.
- Rawls, John 1971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